‘정유라 특혜’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대법 “업무 공정성 방해…입시비리 공모 인정”

최경희 · 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6월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정씨의 이대 특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단초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원준(47)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최씨가 정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하고 이후 남궁 전 차장과 최 전 총장에게 차례로 전달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정씨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사실과 정씨 선발이 자신과 총장의 뜻임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 면접 결과 정씨가 경쟁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남궁 전 처장은 자신과 정윤회씨, 최 전 총장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면접평가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입학 업무가 최 전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 해도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모집은 교무위원들에게 각 위임된 바 독립적 업무에 속해 최 전 총장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최씨가 청담고 교사에게 돈을 준 뇌물죄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교사에게 학사 편의를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김 전 학장과 이 교수 등은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 특혜를 봐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전주형 공동체 성장 돕는다

전주시, 공동체 활동가 위촉식

전주시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온두레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에 전문 활동가를 파견해 성장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는 1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형 공동체인 온두레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공동체 활동가 위촉식을 가졌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전주형 공동체 사업으로, 도시 곳곳에서 교육과 먹거리,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 △공동체 회계지침 교육 △ 활동가 현장역할 등 안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해 활동가 교육을 이수하고 올해 공동체 현장 실무교육을 수료한 활동가 중 심사를 통해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활동가 10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공동체 활동가 10명은 올해 전주형 공동체육성사업에 선정된 온두레 새내기 단계인 디딤단계 · 아파트 공동체 55곳을 찾아다니며 공동체 성장을 위한 도움을 주게 된다.

활동가의 역할은 권역별 공동체사업 현장에서 공동체와 행정의 중간지원 역할로, 세부적으로는 △공동체 회계 관련 지원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지원 △주민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능동적 참여유도 및 공동체 활동 증진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활동가들은 공동체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소해주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동체활동가 양성교육 사업은 시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동취재반

음식점 위생등급제 방문 컨설팅 희망업소 모집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식당의 위생수준을 높여 맛의 고장의 위상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착을 위한 사전방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200개소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전주시 일반음식점 7,900여 개소 중 2.5%인 200개소를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무신고 영업장이 없어야 하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63-281-2371)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우수한 위생수준을 바탕으로 위생등급을 부여받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맛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전주음식 홈페이지 등재 · 홍보 △업소 자체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동취재반

슬로시티 전문 강사 양성 ‘맞손’

박순종 전주시장 권한대행과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15일 전주부시장실에서 슬로시티 전문 강사 양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한옥마을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연간 1100만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주시는 15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동헌에서 전주한옥마을 내 중점사업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순종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한옥마을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한옥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34개 사업을 △원주민 지원분야 △관광객 분야 △공간조성 · 정비 분야 △콘텐츠 분야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주요 사업은 원주민 지원분야의 △원주민 인력채용 사업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지원, 관광객 분야의 △한옥마을 소통 및 홍보강화 △관광통역 청년해설사 운영, 콘텐츠 분야의 △야간 국악 버스킹 시범운영 △평일야간 상설공연 △전주 문화재 야행, 공간 분야의 △한옥마을 실개천 및 쉼터조성 △한옥마을 쓰레기통 개선사업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전주한옥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각의 사업 부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한옥마을 원주민 · 관계자 · 관광객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500세대 LED조명등 무상교체 지원

전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백열등과 형광등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LED조명등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500가구의 노후화된 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되는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등은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과 비교해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전구의 수명도 월등히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또,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로 전구 자체의 발열량이 적은 제품이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 · 수탁 협약을 체결, LED조명등 교체와 전기안전검사 수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평생교육시설 지지 호소하다 그만

정읍시장 예비후보 검찰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혐의는 인정

6 ·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시설을 찾아 반별로 지지를 호소한 전북 정읍시장 한 예비후보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정읍시의 한 평생교육시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력을 인정해주는 곳이다.

A씨는 이날 반별로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기동취재반